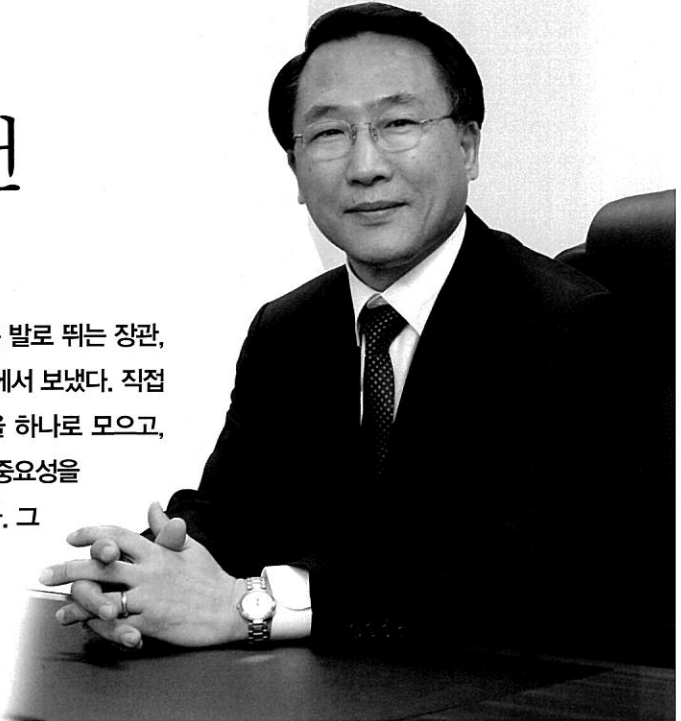


‘안전보건’ 기업 경영의 성공을 보장하는 필수조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그간 방 장관은 발로 뛰는 장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 등의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집무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보냈다. 직접 사고현장을 찾아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한 것은 물론 또 관련 정부부처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사고의 우려가 높은 화학 및 전자·반도체업계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가며 심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사업주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멈춤 없이 발생하던 중대 재해도 다소 주춤해졌다. 행동과 실천으로 산재 감소에 앞장서고 있는 방하남 장관을 만나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취재 김효선 기자 russet0@safety.or.kr /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



취임 100일 동안 역점을 두고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현장의 어려운 난관은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폭을 넓혀 가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평소 신념입니다. 그래서 취임 이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사고 발생 소식을 보고받으면 책상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찾아가서 직접 사고원인을 살펴보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슬픔을 마음으로 느끼고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후 이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산업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폭발·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상시적 유지·보수 작업 등을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는 일이 많아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펼쳤는데, 이 때문에 그 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5월 21일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사고 위험성이 큰 1,200여 개 사업장을 지난 3월 26일부터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등을 확행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작업중지명령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큰 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사업장에 명확히 인식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관한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할 것입니다.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위험작업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위험 정보 제공의무와 법령준수 지도의무 등을 새롭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도급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인가요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화학사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보건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위험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에 대한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감독관의 1인당 담당 사업장 수는 약 5,500개소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가 많습니다. 즉 체계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향후 대폭적인 인력 증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학사고 예방에 특화된 민간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용자지원제도 신설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 맞춤형 안전전문기관 역시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의 경영진 및 근로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은 기업의 윤리 차원을 넘어 경영의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명과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 비용을 소모가 아닌 투자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영진들께는 안전 경영을 책임 있게 실천하기 위해 본사에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현장의 안전조직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공생하는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여러분들 역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와 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갖고 안전보건활동의 최일선에 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지난 3월 14일 전남 여수산단에서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직접 조사하는 한편 유가족을 위로했다.